
제1차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론회



2022.7.6 (수) 10:00 / 민주노총

주최 _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목 차

발 제	
윤석열 경제정책 분석 나원준(경북대 경제학 교수)	p.3
토 론	
윤석열정부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p.31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 영농비 폭격 맞은 농민들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p.39
민생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47
포스트 코로나와 자영업 위기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p.57
반노동 반농민 반민생 윤석열 정부에 맞선 공동행동 모색 주제준(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p.63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발 제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경제정책과 경제위기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응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 경제운용 4대 기조로서의 자유, 공정, 혁신, 연대, 그리고 경제운용 목표로서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 의미 없는 추상적인 선언. 자유는 돈 벌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 지금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것 인지 잠꼬대와 같은 소리. 결국 노동이나 인권, 생태, 건강 등 사회적 가치에 비해 기업들 돈 벌 자유가 우선이라는 것.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지향한다고 함. 문재인 정책으로 시장경제가 무너졌고 그래서 복원한다는 식의 생각. 정치적 보복의 표현.

- 부자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가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면 낙수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기업과 부자의 자유를 억누르는 세 부담과 규제, 조직노동이 주도한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호봉제 임금체계가 가져오는 불공정성 등 요인들이 원인이라는 인식.
 - 노동기본권과 포괄적 단체교섭의 제도적 보장 수준이 낮고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직적 하도급 관계와 만연한 중간착취로 인해 영세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현실을 도외시하는 판단. 전형적인 대기업 위주의 경제관.
 -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첨단산업 초격차 언급. 자금력 있는 재벌 대기업과 빅테크 중심으로 환영받을 것.

- 생산적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는 박근혜 때 강조했던 개념. 생산적 복지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개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굳이 맞춤형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적 축소개편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임. 근로연계형 복지는 선별복지로서의 한계가 뚜렷할 것.

- 4대 정책 방향
 - 민간중심 역동경제 - 규제, 기업활력, 공정시장질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공공부문개혁,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산업

- 미래대비 선도경제 -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구조 대응, 탄중 대응
 - 함께가는 행복경제 - 복지시스템 고도화, 근로유인 강화
-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내용이 규제 개혁이며 그 내용은 완화 일변도라고 할 수 있음. 규제 완화를 대단히 강조.
- 부처별 규제혁신 TF, 민관합동회의 : 이명박근혜 때 하던 것과 대동소이. 실은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부터는 규제개혁을 강조한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 그러나 생명, 안전, 건강 등 규제의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현 규제 체계를 점검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부처별 감축목표율 200% 설정 : 규제 하나 신설 하려면 기존 규제 두 개 없애야 한다는 접근법으로 규제를 수량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 공무원들의 형식주의가 불 보듯 뻔함.
 - 규제 그동안 많이 없었고 일부 행정적인 규제들이 있다면 줄이면 됨. 하지만 남은 것들은 생명, 안전, 건강, 인권, 노동기본권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것들이 많을 것.
 - 신설 규제는 모두 일몰제 적용한다는 방침. 제도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사회적 갈등비용만 늘릴 수 있음.
 - 생각을 바꿔야 함. 규제는 시장을, 즉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거냐의 문제이지 시장을 대체하거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님. 자율성의 범위를 사회적 가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깨뜨리겠다는 것은 자칫 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재벌과 대기업 집단에 친화적인 입장 노골화.
- 불합리한 차별규제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를 제시. 경쟁입찰 시 제한을 축소하고 대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친족범위는 좁히겠다는 방침.
- 기업 세 부담 완화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놀라운 억지.
-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기업들의 소원수리 성격.
 - 배당소득과세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익금 불산입 방향으로, 즉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이 역시 기업들 소원수리.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역시 기업들 소원수리.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혜택 없음(기수혜).
 - 투자촉진세 정비로 투자, 임금, 상생협력 형태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이윤의 20%를 법인세로추가 납부하게 해온 정책을 폐지. 이 역시 기업 세부담 완화 위한 것.
-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 이윤이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이루어졌던 많은 실증분석에서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왔음. 법인세 인하는 단지 주주들의 입장을 들어준 것뿐. 국가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상위구간 중심의 부자 증세가 필요한 시점.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가업승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자산가들을 위한 것.
-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세 증여세 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해온 사항. 왜냐하면 현재 공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자산가들만 득을 보고 있기 때문임. 윤석열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기업주들, 자산가들의 이해관계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것.
-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제한하는 취지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임.
- 공정거래법 관련으로도 부당지원이나 사적편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적용 범위는 좁히고 예외 인정 범위는 넓힐 것이 예상됨.
-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할 방침. 대기업의 사업 진출 지원 목적 있을 것.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현실에서의 갑을관계를 감안할 때 효과성이 제한될 우려.
 - 납품단가 연동제와 이를 위한 조정협의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책은 거의 몇 안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긴 한데 구체화 단계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할 듯.
-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 이는 규제 사각지대를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빅테크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 예상됨.
- 사회복지 서비스에의 민간 참여 확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역행적 정책. 보편복지와 공공성 가치를 부인하고 그간에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 부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자본에

사업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의도일 것.

-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상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공급 확대 목적의 인허가 규제 완화 등 내용. 한마디로 빗내서 집 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신호. 서민 주거안정은 관심 밖인 듯.
- 도시 용도지역 개편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 부동산 개발 자유화가 혁신이라는 억지 논리.

2. 미국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와 노동시장 상황

-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연준’)의 고민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연준이 보유자산을 줄이는 것)의 출구전략을 어떤 강도와 어떤 속도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있음. 그런데 연준으로서는 다행인 것이,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지면서 최근까지 기준으로 볼 때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에 비교적 근접해 있기 때문.
 -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비교적 가까운 상태이고 어떤 부양책으로도 실업률을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음.

-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은 상당 수준 회복된 상황이라는 함.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는 위기 이전의 고용을 회복하기까지 80개월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코로나 위기의 경우 25개월만인 2022년 1월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노동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다는 것.
 - 기업들의 구인난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에 따라 임금 상승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기업의 노동수요가 늘면서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상황이 양호하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것과 함께 노동자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이는 통계지표 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완전고용처럼 보이는 현상이 노동공급이 줄어든 결과라면 해석에 주의해야 함. 그렇다면 최근 실업 감소를 가져온 노동시장 이탈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 지금까지 제시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 (1) ~ (4)의 네 가지임.
 - (1) 대면 등교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 바이든 정부 정책으로 인해,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64세 인구가 감소. 생산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노동공급 감소.
 - (3) 트럼프 정부 당시부터 이민 정책이 강경했고 이후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큰 폭 위축.
 - (4)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富의 효과로 노동시장 유입이 감소.
 - 그밖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좀 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거나, 대면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감염될까 두려워 일을 그만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설득력은 없어 보임.

- 이상 노동시장 상황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보면 통화정책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이 타당할 수 있음. 하지만 반대로 노동시장 상황 변화를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노동의 상대적 협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크게할 수 있음.
- 그 점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최근 개시한 통화긴축의 강도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노동시장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
 - 현재의 전 세계 물가 상승은 1차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생산비용과 관련된 공급 측 요인의 영향.
 - 그러나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와 같은 1차적인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물가 상승 → 임금 상승 → 물가 상승 → 임금 상승 → ... 의 이른바 임금-물가 연쇄 상승(wage-price spiral)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음. 다만 이는 물가 상승을 임금 상승으로 보상받으려는 노동의 대응이 강한 협상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
 - 비록 최근 들어 미국 노동시장에서 노조 조직이 늘고 전투성이 고양되는 측면이 관측된다고 하지만, 경기순환 요인을 제외하면 구조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개선되고 할 만한 근거는 부족. 아울러 실제로는 노동의 임금교섭도 이미 올라버린 물가만큼을 쫓아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할 뿐, 주류 경제학자들이 상상하듯 미래 인플레이션을 전망해 임금인상요구에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음.
-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실업자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정책.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 중 누군가의 일자리를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 그 사실은 표준적인 대학 거시경제학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음. 통화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

3. 세계경제 회복 경로

- 국제정세에 더 이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의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곧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세계경제 회복세는 둔화된 상태에서나마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어 왔음.
 - 기존에는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주로 선진국 경제의 서비스 생산이 되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음. 특히 회복의 중심 지역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세는 크게 둔화된 모습.
 - 2022년 하반기는 백신 보급 확산으로 공급망 불안정의 원인이었던 신흥국 방역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접쳐졌음.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인 회복 흐름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종전까지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전쟁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

-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은 점점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연준의 정책 실패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 경기침체 예상이 커지는 상황.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는 연준의 출구전략 외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부진의 영향,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등으로 뚜렷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은 각국 중앙은행의 도미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주요국의 회복세를 방해할 것이 확실.
 - 공급망 불안정과 국제 유가 상승에 기인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킬 요인.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는 국제 곡물 및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공급망 불안정을 증폭시켜 경제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요인.
 - 여기에 추가해 중국 경제도 최근 부진한 양상이고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극단적인 봉쇄가 가져온 후유증이 작지 않아 세계경제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으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경우 다시 한 번 조업 중단을 가져올 수 있어 팬데믹의 영향 또한 간과하기는 어려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회복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

- 연준의 급격한 출구전략 실행은 과거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부추겨 국제금융위기로 비화한 사례가 있음.
 - 2013년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미국경제가 서서히 벗어나는 상황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는 테이퍼링(Tapering)에 착수.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재차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대두되었고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은 외환위기 위험을 높였음. 당시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에서 외자 유출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된 바 있음.
- 이번 연준의 출구전략에서도 이와 같은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연될 소지가 있음. 이는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회복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

4. 원자재 시장과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국제 원자재 시장과 국제 곡물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해왔음.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의 공급 차질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 러시아는 팔라듐, 천연가스, 원유, 밀,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국.
 - 러시아 원유 구매대금에 대한 신용장 발행 중단, SWIFT 국제결제망으로부터의 퇴출, 영국의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캐나다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확대 일로.
 - 미국 등이 국제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으나 역부족.

- 원유 시장은 각국의 재고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로 가격 상승 압력이 큰 상황. 특히 OPEC의 원유 공급 계획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사정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폭도 가변적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전에 대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기존 설비의 보수도 지연되었음. 이로 인해 OPEC의 공급 계획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
 - 천연가스 시장은 북반구 이상기후 영향으로 난방용 수요가 급증해 유럽 각국의 재고 수준이 많이 낮아진 탓에 가격 상승 압력이 매우 큼. 특히 러시아와 노드스트림 송인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이 격해진 이후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석유산업이 활황을 맞으며 유전 개발 및 정제 등을 위한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음. 하지만 최근 원유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유가가 고공행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국의 탈탄소 및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유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양상.
 - 원유를 정제해 경유, 휘발유 등을 얻는 정제 부문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노후 설비가 증설된 설비보다 많아 일평균 정제 능력이 75만 배럴 감소. 올해와 내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130-140만 배럴 증가할 것이 예측되나 이후 다시 축소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줄여가야 할 석유산업 관련 시설이 거꾸로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아가는 흐름. 이는 2050 탄중 목표를 둘러싼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자 향후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을 전망케 하는 요인.

-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최근 가격 상승기 직전까지 약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보합세를 보였음. 이에 따라 그 기간 중에는 원자재 개발을 위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음. 낮은 가격으로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탓임. 향후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려면 먼저 개발 투자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투자 기간이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임. 따라서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원자재 시장이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OPEC을 비롯한 원자재 관련 카르텔의 영향력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 유가가 국제 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될 경우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
 - 1970년대 석유과동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재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요인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재연될 가능성. 그 방향으로 국제정세가 형성되면 산유국 카르텔의 영향력과 자원 민족주의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

- 한편 지금은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 규제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중요. 탄소배출량이 큰 원자재는 수요 확대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투자도 기피될 것임. 그로 인해 각국 경제는 고비용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음.
 - 친환경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중심의 화력발전 수요가 쉽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진단. 에너지 가격이 간헐적으로 급등할 위험 상존. 유럽에서 2021년에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자 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난 사례.
 -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계획을 전제로 하는 경우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한 후퇴 사례를 보면 기존에 친환경적이라고 간주되었던 기술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탄소중립 정책 자체도 여전히 불확실.
 - 다만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부 광물은 자원 개발 투자가 국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도 폭등세.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세에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비용 부담이 앞으로 더해질 전망.
 -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달성 속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간 새로운 타협점을 어느 수준에서 도출할 것인지가 관건.

- 향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구조화될 것이 예상됨. 세계경제가 마야흐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큼.

5.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 세계경제가 1970년대 석유과동을 극복하고 1984년 이후 최근까지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대체로 주류경제학에서는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의 매정한 단호박 통화긴축이 연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당시 볼커는 통화주의자 입장에서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물가를 잡겠다고 했음. 그러나 사실 연준은 그 시기에 약속했던 M1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 통화량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공표했던 목표 범위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임. 그렇게 했는데도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니 설명은 궁색해 보임.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뚜렷한 방법도 딱히 없음.
- 볼커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했던 일은 통화량 증가율을 맞추는다고 애 쓴 탓에 이자율은 전혀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 초단기이자율이 20%를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뛰면서 처음에는 채권시장이, 그런 다음에는 실물경제가 극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짐. 말하자면 연준은 당시 물가를 잡는다고 경제를 목 졸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임.
 - 볼커의 통화정책이 사실은 실패한 것이었음은 이후 연준이 볼커 식의 통화량 목표제를 폐기하고 금리 중시 통화정책으로 정책체계를 개편한 데에서 잘 드러남. 볼커가 정말 제대로 잘 했다면 왜 통화정책체계를 바꿨겠는가 그 말임.
- 볼커의 시대 이후 최근까지 물가안정이 이어져온 이유로 연준을 위시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역량이 출중해진 덕이라는 이야기,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으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역시 설득력이 별로 없음.
- 주요 각국이 경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플레이션은 대개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 순수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즉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된 사례는 실제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로도 물가와 산출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로 정리됨.
- 경제학의 짧지 않은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화폐량이 늘어나

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 해석이 틀렸다는 것임. 화폐수량설의 오류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매우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경제학자들과 기자들,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는 진보진영에서조차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식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엄연히 틀린 이 주장을 귀가 닳도록 반복 중.
-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은 이유는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구조가 미국의 주도면밀한 개입(유가 하락)으로 망가졌기 때문이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 아님. 짐바브웨가 인플레이션을 겪은 이유는 오랜 내전 등으로 경제의 생산체계가 파탄 났기 때문.
-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생각은 금본위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과 교환되는 지폐의 발행을 늘리면 지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그런 생각을 금본위제가 폐지된 지도 오래된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함. 그런 생각에 갇히면 소극성과 보수적인 긴축 편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미국 경제가 1984년 이후 물가안정을 유지해온 비결 역시 공급 측면 요인이 통제되었기 때문임. 그것은 크게 원유의 공급과잉과 제조업 생산 공정의 신흥국 이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980년대 중엽 이후 국제 원유 시장은 일시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 왔음. 왜냐하면 과거 고유가 시절에 북해와 시베리아, 알래스카, 멕시코만 등에서 시작된 신규 유전 투자 덕에 1980년대 중엽부터는 원유 공급이 오히려 과잉 상태로 반전했기 때문.
-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 생산 공정이 저비용의 이점을 추구하고자 신흥국으로 대거 이전되는 일이 벌어졌음. 아울러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임금 인상을 억누르는 효과도 있었음. 이와 같은 생산비용 절감 요인이 물가안정에 기여했음.

□ 그렇다면 현재 미국 경제에서는 1984년 이후 물가안정을 유지해온 이상 두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가안정 상태에 균열을 가져올만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함.

- 앞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국제 원자재 시장은 사실상 공급자 우위로 이미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로 인해 신규 자원 개발 투자가 향후 제한될 예상. 이는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물가불안을 구조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즉, 원자재 시장을 보면 기존의 물가안정 요인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더 이상의 세계화 진전에 한계를 보여 왔음. 왜냐하면 공급망의 신흥국으로의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연결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더 이상 추가적인 확대는 어렵기 때문. 더욱이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특징으로 했던 여러 신흥국에서 점차 인건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세계화의 경제적 이득은 소진되고 있다는 진단.

- 이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 리쇼어링은 선진국이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재이전하는 것.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그리고 중미 갈등 속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리쇼어링을 한층 강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코로나 위기로 공급망 불안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미래 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 역시 비용 인상 요인이 됨.
- 중미 갈등 이후 세계경제가 불려화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분열이 심화되는 신냉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정치적 격변이 대규모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점증.
- 요컨대 1980년대 중엽 이후 물가안정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판단이 합리적.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이란?

- GVC에 기반한 생산방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수직분할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전통적인 자국내 수직통합형 생산방식과 구별. 다국적기업과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방식으로 GVC가 세계화.

□ 공급망 세계화는 국가 간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계기

- 불균등 발전의 첫 번째 차원 : GVC 내에서의 위치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해내지 못하고 단순 조립공정을 중심으로 GVC에 참여한 나라들은 잉여 유출을 경험.
- 불균등 발전의 두 번째 차원 : 지역적으로는 제조와 생산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global shift 현상으로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
- 미국의 제조업 무역에 있어 1990년대 일본 + NICs와의 사이에 맺어졌던 특수한 관계가 2010년대 이후 중국 + ASEAN으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을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만든 것은 결국 미국. 그런데 이제 중국을 GVC에서 도려내려는 것도 또 미국.

□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고 대중국 정책을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정책이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경향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작동이 직접적으로 중지되는 계기들을 제공.

□ 중국 배제의 방식

- 기존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이득을 내세우며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에 치중했지만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면서 세계전략을 수정하고 기술패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상황. 리쇼어링, 중국과의 디커플링, 노골적인 반중국 동맹을 서유럽과 한국, 일본 등 전통 우방국들에게 강요.
- 중미 경쟁의 양상은 점차 전면화될 위험 있음. 경제 규모 경쟁, 군사력 경쟁, 안보를 둘러싼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쟁 + 제도 경쟁. 여기서 제도 경쟁은 미국이 규칙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적 우월성(과거에는 소련에 맞선 반공블록,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반권위주의 블록)을 내세우려는 것.

- 중국 배제의 방식은 제도 경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권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과 가치 중심 블록화. 아시아에서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유럽에서의 구미 무역기술이사회(TTC)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며 블록화하려는 시도.
- 미국이 주도하는 GVC 재편과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기
 -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혹은 경제학에서의 신고전학파적 세계관에서는 전 지구적 범위로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상호의존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면 경제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 경제의 연계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세계경제 내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구조가 등장. 이와 같은 취약성은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음. 최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 존재감 없던 어떤 남아시아 나라에서 델타 감염이 확산되어 공장이 문을 닫자 세계경제 반도체 시장이 멈추는 현상. 취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이 생산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
- 미래 국제경제질서의 전망
 - 중미갈등이 해소되면서 기존의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WTO 체제로 세계경제가 복귀하는 시나리오
 -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 우위를 확보하고 아시아 지역이 미국을 밀어내면서 중국 중심으로 블록화되는 시나리오
 - 탈세계화1 : 미국의 의도와 달리 단일 헤게모니가 무너지면서 다극화 내지는 강해지는 중국과 약해지는 미국으로 양극화. 중미간 무역은 사실상 붕괴. 20세기의 전간기와 유사한 상황. 이런 경우 한국의 전략은?
 - 탈세계화2 : 미국의 의도대로 가치 기반 블록화. 냉전 시대 Two world model을 본뜬 신냉전.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 반권위주의 블록의 공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 이런 경우 한국의 전략은?
 - 부분적인 탈세계화 : 미국의 의도대로 가치 기반 블록화로 중국을 첨단산업 및 전략적인 부문에서는 배제하되, 중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는 전통산업에 있어서는 기존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선별적 디커플링. 이런 경우 한국의 전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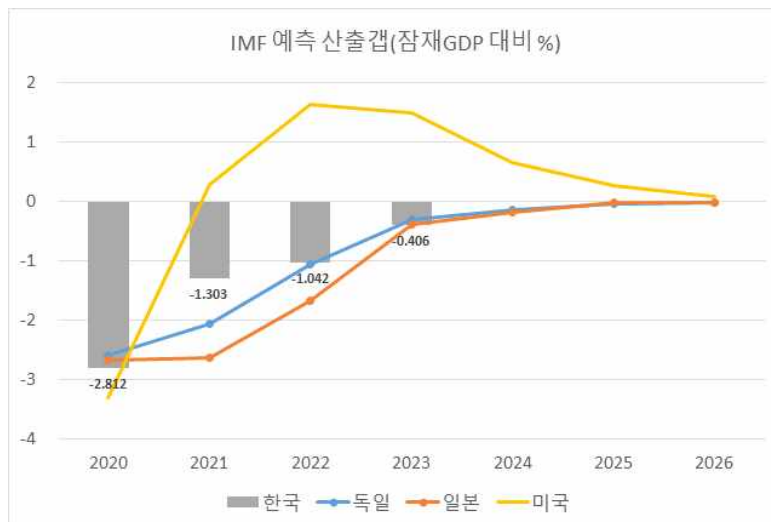
7.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뚜렷한 물가상승 추세. 원자재 시장의 공급자 우위로의 변화는 앞으로도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세는 꺾이기 어렵다는 판단.
- 탄소중립 정책 역시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더할 전망이다.

□ 실물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산출갭

-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원인의 해석에 곤란한 점이 있어 수요 증가에 따른 회복은 아직 완전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특히 부문별 계층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큰 점이 중요.
-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즉 수요 측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경제부총리의 업포와는 달리 고용과 임금이 물가상승을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
- 올해 4월에 발표된 최근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2022년과 2023년에도 경기순환 상의 침체 국면. 즉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수요압력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실정. 반면 미국은 이미 2021년에 경기순환 상의 침체 국면을 벗어났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수요압력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단 4월 IMF 전망은 경제침체 가능성을 다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



-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수요 측 요인을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에 그칠 공

산이 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해수면 상승이 중지되는 것도 아님.

- 예시 : Roosevelt Institute의 J. W. Mason이 BARRON'S에 6월 18일 기고한 칼럼 (<https://www.barrons.com/articles/fed-inflation-recession-labor-rates-51655495956?fbclid=IwAR1-c-pw-56F2xH5KIcmctK77aW-QEyn1dJ3VtkVvHSxxvW7qJVFm7TBTvw>).
-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을 바꾸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실증적 기초가 취약하며 충분히 입증된 가설이 아님. 각종 매체를 통해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여론조사로 측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임.
- 여론조사 방식 말고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된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 국채 10년물 수익률 3.8%에서 물가연동국채 10년물 수익률 1.5%를 차감한 BEI(Break-Even Inflation)는 2.3%. 그런데도 민간 기대를 낮춘다고?

□ 자본 유출의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기 어려움. 왜냐하면 양국에 이자율 차이가 커지면 자본 이동이 불규칙하게 급격히 일어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
- 최악의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을 뿐 통화스왑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주목됨. 그런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낭만을 못 벗어던진 이창용 한은 총재처럼 외환시장에 불개입하겠다고 선불리 공개적으로 약속할 일은 아님. 불장난의 후과는 클 수 있음.
- 물론 오늘의 한국경제는 그런 다시 외환위기가 치달을 위험이 아주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자본 유출 및 이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한 가계부채 부담에 짓눌려 있는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그나마도 더디게 진행되는 현재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있음.

□ 어느 정도의 환율 상승은 불가피

-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환율 상승 요인.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므로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절히 인상해 환율 변동 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만 기준금

리를 적정 폭 올리지 않는 경우보다는 환율 인상이 더 클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의 환율 상승은 용인하더라도 선부르게 빅스텝을 따라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 금리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 특히 가계부채 취약 차주의 테일 리스크는 유의해야 함.

□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나아가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소지도 있음. 물론 자본 유출이 일어나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은 양국 금리 차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더 크게 기인할 수도 있음. 즉 금리 역전이 반드시 외환시장 불안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인 것은 아님. 오히려 괜히 금리를 급히 인상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역으로 그로 인해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 하지만 금리 차가 좁혀지고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되돌리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음. 큰 틀에서 볼 때 금리 역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님.
- 다만 최근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 1300원선에 대한 테스트가 주춤하는 모습. 그동안 외국인 주식 비중이 이미 어느 정도 줄었고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장기투자 성격이 좀 더 강해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압력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앞으로도 언제든 재차 1300원선 테스트가 재연될 수 있음.
- 과거에도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음. 과거 사례를 보면 역전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님. 그보다는 국내 경제 여건, 이른바 펀더멘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평.
-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이나 외화자금시장에 혼란이 오더라도 외환건전성 자체는 과거보다 개선된 상태임은 분명. 외환보유고가 단기대외채무와 비교하면 충분한 점도 의미 있음.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은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수 있음.

□ 산업경제의 기초 지표들과 특히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평가해야 할 듯.

- 반도체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소매판매도 감소.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침체 흐름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양상.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회복 과정이 어느새 끝나고 이미 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는 판단이 가능.
- 올해 들어 5월까지 관세청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 78.5억불. 산업연구원은 연간 적자 규모를 158억불로 전망.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연간 무역수지 133억불 적자를 넘어서는 수준. 중간재를 수입한 다음 가공해 모듈 단위로 재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무역수지가 한두 달이 아니라 연간으로 적자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 더욱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산업연구원)가 명목수출액 기준으로 상반기 19.5%인데 반해 하반기에는 3.1%에 그치는 점도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언급한 정부 대책을 보면, 일부 서민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하반기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풀며 수출을 지원하는 것에 방점.
 - 그러나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늘어나야 하므로 무역 역조는 완화되지 않고 정반대로 오히려 심화될 것임.
 - 이런 식의 대책은 경제위기를 맞아 부유층과 독점재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정권의 계급적 기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법인세 깎아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린 일은 없었음. 차제에 상속세나 부동산 보유세 낮춰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더라도 책임 안지겠다는 최악의 정치. 경제상황 개선에 효과 없는 헛다리짚는 정책들.
- 연준의 원리주의적인 매파적 태도로 정책 실패 가능성 커진 상황.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중요.
 - 연준은 경제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즉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 그런데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수요 측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자칫 물가는 제대로 못 잡고 실물 경제의 침체만 불러올 위험이 있음.
 -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기간을 비롯해 연준의 선부른 긴축이 경제를 이중 침체(double deep)로 접어들게 했던 선례가 있음.
 - 연준의 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미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경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움.
- 우크라이나 전쟁도 통제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요인
 -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 병목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유럽경제의 침체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러시아는 가스 1위, 석유 2위, 석탄 3위의 자원 대국.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미 비화. 이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제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 있음. 현재 세계경제는 석유와 가스, 곡물 등 에너지와 식량자원이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형국.
 - 에너지 가격 폭등이 초래되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커져 결국 목표 자체도 흔들리기 쉬움. 각국이 에너지 안보에 나서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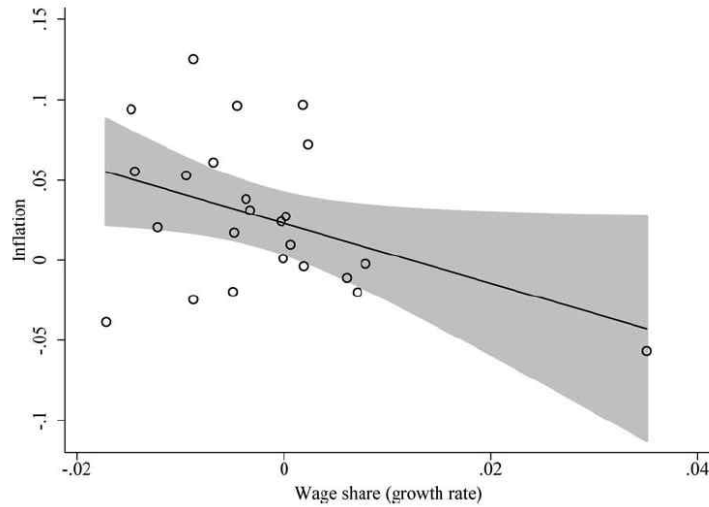
계는 급격한 속도로 블랙화되고 지정학적 위험은 더욱 고조될 수 있음.

- 지금은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간. 돌아온 인플레이션의 시대.
 -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 경제의 고비용 구조로의 전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며 1970년대 맞았던 것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
 - 서방과 중국-러시아-이란이 맞서는 블록화된 세계경제에서 국지적 분쟁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음. 신냉전 구도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도처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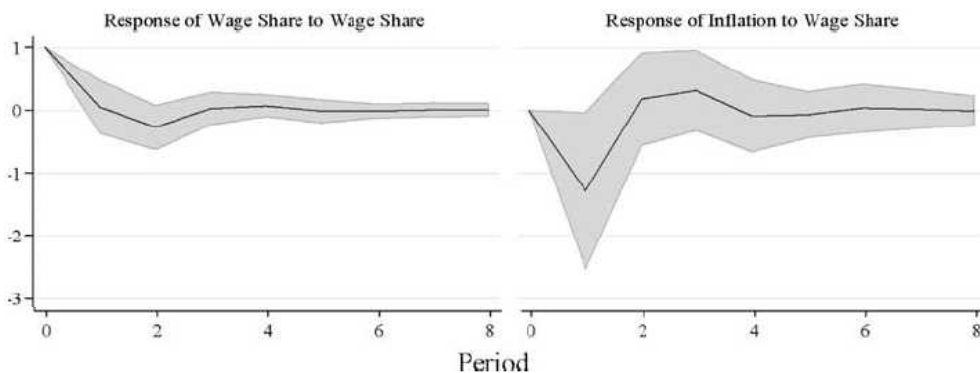
8. 진보진영의 정책대응

□ **[임단협]**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노동자한테 불리하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걸까?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Ribeiro 등의 공동연구(2021년 저명학술지 Review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에 따르면 임금 몫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관계가 존재. 이 그림은 1990-2014년 기간에 걸쳐 한국이 포함된 133개 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그림을 보면 임금 몫이 더 크게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음.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



○ 보다 체계적인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금 몫의 증가율이 1%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율은 1년의 시차를 두고 1.28% 하락.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주장. 왜 임금 몫이 늘어

나면 물가가 오히려 안정되는가? 그 이유는 임금 폭이 늘어나면 이로 인해 기업들한테는 생산성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자극이 되기 때문임.

- **[이윤-물가의 연쇄 상승 가능성]**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 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price spiral)에 대한 보수층의 경계감 높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조직노동과 독점자본의 상대적 교섭력 차이를 고려하면 임금-물가가 아니라 **이윤-물가의 연쇄 상승(profit-price spiral)**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지도 모름.
-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독점자본은 일부는 단가 상승으로 일부는 하청기업에 원가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보장받음. 임금주도성장론의 주창자 중 한 명인 네덜란드 경제학자 Servaas Storm 교수는 미국의 경우 최근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임금보다 이윤 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Josh Bivens 박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윤-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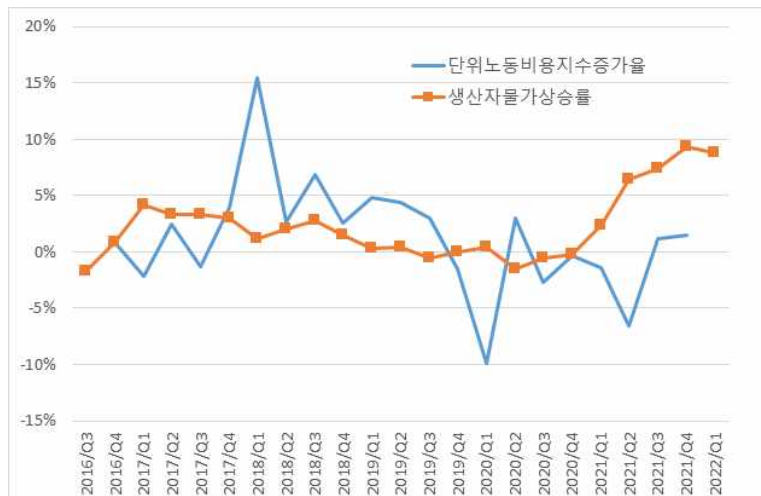
【미국 비금융법인의 단가 상승 원인】

기간	단위노동비용	비노동 투입비용	기업이윤
1979년 - 2019년	56.0%	30.8%	13.1%
2020.2분기-2022.1분기	19.1%	42.6%	38.2%

자료 : Strom (2022)

- 한국에서도 2021년 들어 가팔라진 물가상승세는 임금 상승과는 무관하며 임금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정체된 상태라는 판단.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했으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같은 기간 1.4% 상승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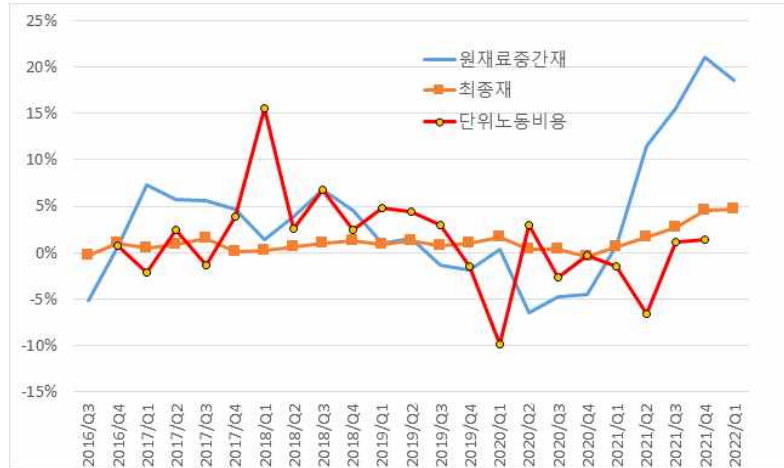
【생산자물가 상승 vs. 단위노동비용 상승】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다만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생산재(원재료와 중간재) 물가지수와 최종재 물가지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가격 전가 폭은 아직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가공단계별 물가상승 vs. 단위노동비용 상승】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의 전략적 가격통제] 재벌 대기업이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물가상승으로 전가시키고 있을 가능성. 그 고리를 차단하는 한 가지 전통적인 방법은 전략적 가격통제로 가격인상률을 직접 관리하는 것.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전에는 전략적 가격통제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쓰이기도 했음.
 -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가격통제의 범위를 서민생활과 관련된 재벌 대기업 주요 제품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넓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한편 공공요금은 이미 전략적 가격통제의 대상. 현 시기에는 동결이 요구될 수 있을 듯.
- [재정정책] 인플레이션은 노동자한테 불리하므로 재정은 긴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향이 좋을까?
 - 재정을 확장할수록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음. 거시경제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 그러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현재 수준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경제위기라는 엄중한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함.**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국채 실질금리는 1% 수준. 만약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상회하도록 유지시킬 수 있다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사회안전망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 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참고로 국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대략 2% 수준.
- 긴축은 언제나 신자유주의의 논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노동자계급은 경제위기 기간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됨.
- 부자 증세 요구.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성격도 갖지만 보다 영구적으로 과세공정성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 한편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민주당을 압박할 필요.
- 인플레이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이 과잉유동성을 낳았고 그로 인해 물가상승이 초래되었다는 해석을 경계해야 할 필요.
-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과잉유동성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설명은 긴축 이데올로기의 뿌리 깊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 그러나 그런 해석은 근거가 취약함. 재정지출 증가로 통화량은 늘었음.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어떤 기준으로 과잉이란 말인가? 정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할 수 있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라도 돈을 덜 써야 옳았나? 그렇지 않음.
 - 과잉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설명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통화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 그러나 그것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반박된 가설. 실제로는 통화량은 경제상황에 맞춰 결과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뿐 그것의 변동이 물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못함.
 - 진보정치는 재정건전성 담론에 맞서 왔음. 일각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일조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경제 이론에도 안 맞고 실천적으로도 오류. 최근 몇 년간 재정정책은 충분히 확장적이지 못했음. 오늘도 긴축 담론에 대항할 필요성 큼.
-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의 연대]** 물가상승기 임금 교섭과 관련된 민주노조운동은 중소기업인 및 취약계층, 청년층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제시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 시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등장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에 입법화, 시행하도록 민주노총이 압박할 수 있을까?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요구.
 -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가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경우 물가상승분만큼 감소한 실질생계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저소득 가구

를 대상으로 식음료 등 생활필수품 관련 보조금을 지원. 중소기업이나 청년층의 저리 대환.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영업 관련 비용요인을 통제할 필요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제시. 빅테크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 요구.
- 중소기업 및 취약가구가 코로나로 인해 입은 손실만큼 부채 탕감.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 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윤석열정부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1. 윤석열정부의 경제노동정책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윤석열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①민간중심 역동경제 ②체질개선 도약경제 ③미래대비 선도경제 ④함께 가는 행복경제> 제시.
- 구체내용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5대부문(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과학기술진흥과 인구위기 대응,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 기업활동에 대한 일체의 규제완화등 역사적으로 퇴조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활

2) 노동정책

- 6/23.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검토 (선택적 근로로 시간제 정산기간 변경,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
 - 임금체계 개편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제로 전환,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금정보의 제공과 임금체계가이드북 보급, 일터혁신 컨설팅,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적 기반 마련(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 7월~10월 :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구성, 운영
- 노동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다짐으로 노동자의 저항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예고.
- 노동시간과 임금유연화는 우선 추진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총의 제안서에 담긴 기간제·파견제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등 고용유연화와 최저임금제 무력화도 추진할 것. 다만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노동

계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 이후 또는 노동조합의 고립, 무력화 이후 추진할 것.

-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궁극적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지향.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과 점거등 사업장 쟁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추진하고 당면하게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합의시 부분근로자대표제의 활용으로 직군·세대간 분열과 노동조합 대표성 약화를 시도.

※ 참고 :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2022. 3. 27. 경총)

<1>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원칙 확립
-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내부거래 규제 개선
- 경제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친족범위 축소

<2>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 상속세 완화 : 최고세율 50% -> 25%
- 법인세 인하 : 25% 22%,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경직성 완화 - 더 쉬운 해고
-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 업종 확대,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기간제법 개정으로 기간제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으로 확대
-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동의를 의견청취로 변경
-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관련 취업규칙 변경 법리개선)

<4>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 - 무관용 원칙 적용
-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3) 공공·연금개혁

- 전방위적 재정혁신 : 재정총량 관리목표설정(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 공공기관 혁신 : 민간부분과 경합, 유사중복업무 기능·인력 조정, 출자회사 정리등 인센티브 부여, 복리후생 운영현황 실태조사 경영평가 반영, 재무위험 기관 집중관리제(한전, LH, 도로공사, 인천공항,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등) 연공서열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중심 전환
- 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사적연금 활성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 인사, 재정권을 무기로 강도 높은 공공부문개혁 우선추진, 가시적 성과 확보

2. 사업기조와 방향

- 1)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근본적 체제전환운동으로 발전
 - 민주노총은 민생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한 민영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민중생존권-사회공공성-노동권 의제의 결합과 공세적 투쟁 전개.
- 2) 절박한 민중생존권 의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민중적 투쟁으로 확산
 - 노동자, 민중진영 및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광범위한 민생연대를 구축하여 민중생존권투쟁전선을 확산하고 민중진영요구를 정식화하여 공동투쟁 강화.
- 3) 노동계약 저지 투쟁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결합, 개혁입법 쟁취
 - 당면한 노동시간, 임금체계 유연화를 저지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생명안전 보장, 비정규직 철폐, 돌봄국가책임을 핵심으로 좋은 일자리 쟁취 투쟁
- 4) 주체역량 강화, 여론전의 강화, 연대전선의 확장을 통한 지지기반의 확장
 - 하반기투쟁에 대한 조직적 결의, 연대전선의 구축과 강화, 여론전의 가화를 통한 민주노총투쟁의 사회적 지지기반 확대.
- 5) 대북적대군사훈련중단 등 신냉전체제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반대 등 신냉전체제구축과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3. 민주노총의 요구

1) 물가폭등-민생위기, 사회공공성 국가책임 : 민중생존 3대요구

①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급한 민생대책

- 물가올라 못살겠다, 임금을 인상하라!
- 정유사를 규제하고 기름값을 인하하라!
- 전기-가스-수도 필수공공재를 무상화하라!
-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생계형 서민대출 금리 동결하라

② 재벌-부자 증세

-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
-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에 증세, 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 재벌 감세 반대!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세 폐지-상속세 완화 반대

③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공공성 국가책임

- 철도, 에너지, 의료, 공항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공영화
- 돌봄 국가책임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무상제 실시
- 사회보험 국가 책임 확대 :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지원 확대.

2) 노동계약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권 3대 요구

① 노동계약 중단

- 노동시간 유연화 중단,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 부분 근로자 대표제 등 노조무력화정책 폐지, 노조탄압 중단

②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플랫폼·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복수노조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초기업교섭 보장
-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③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비정규직 철폐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
- 중간착취 근절-파견법 폐지, 기간제법 폐지
- 공무원 차별철폐·법제화

○ 모든 노동자의 노동안전-중대재해 근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 시행령 개악저지
- 건설안전특별법 및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4. 하반기 사업계획

- 7월 20일(예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
- 8월 13일. “한미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한반도평화실현 노동자대회 ‘
- 9월 24일. <민생위기-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개악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10월. 의제별 투쟁(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간접고용, 특수고용, 청년노동자대회등)
- 11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총궐기 투쟁(서울, 10만 집결)
- 11월말~12월. 개혁입법 쟁취 끝장투쟁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 론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 영농비 폭격 맞은 농민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

1. 들어가며

지난 1~2년 사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코로나19로 인해 스멀스멀 피어 오르던 식량위기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칼로리의 12%를 담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식량 수출국인 양국에서 수출되는 식량이 줄어들면서 국제곡물가격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약 50개국에 두 나라로부터 최소 30%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 나라가 수입하는 밀의 절반 이상이 양국으로부터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몽골·아르메니아·이집트·터키·이란 등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 피해는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M. Beasley)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전쟁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재앙 위에 재앙을 더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로 이런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두 나라에 근접한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진 않다.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마저도 쌀이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불안요소이다. 지난달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20% 선조차 무너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제 식량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이에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법제화·목표치 재설정 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업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덮친 식량 공급난에 지구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염

병과 기후재난에 이어 사료값·비료값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2019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으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하듯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식량주권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농업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이다.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확인됐다.

2. 3고 시대, 폭등하는 생산비

물가가 상승하며 금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3고 시대와 함께 농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이미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대표되었던 요소부족 사태 속에 비료값이 인상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전남의 한 지역농협에 따르면, 계통계약을 통해 취급·판매 중인 무기질비료(원예용 포함) 20개 제품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약 81% 올랐다. 요소비료의 경우 약 168.5%라는 믿기 힘든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요소(프릴) 품목이 바로 그것인데, 2020년 20kg 한 포대에 9,250원 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800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2만9,000원으로 뛰었다.

농약과 필름값 등 시설자재 비용도 덩달아 올랐고, 살충·살균제와 제초제값도 평균 8.7%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류비이다.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경유는 6월 22일 기준 1리터 당 1,626원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03.8%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1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원래 면세대상이었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도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술했듯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도 함께 폭등한 것이다. 작년 기준 11,000원 대였던 25kg 사료 1포 가격은 올해 15,000원 선으로 상승했다. 마리당 사료값 평균을 따져보면 번식우 기준(조사료 제외) 월 10만원 정도였던 것이 마리 당 13~14만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료값이 앞으로도 30% 정도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농자재 뿐만이 아니다. 인건비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 현장농민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특히 일부 발작물의 경우 수확기가 특정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된 형편이다. 경북 영주에서는 일 8~9만 원 가량에서 형성되었던 사과농사 인건비가 40% 이상 올라 현재 12~13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경남 창녕의 마늘농가들은 인건비가 일 18만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일손을 부르지 못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운송비와 포장재 가격까지 오르는 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폭등하는 생산비 때문에 재배면적을 줄이고, 작목을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지은 농사를 다 갈아엎고, 그것조차 안 되면 농업을 포기한다. 이것이 농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3. 농산물가격만 때려잡는 정부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6월에는 다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날로 상승하는 물가를 잡겠다며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행사’에서는 농업분야 대책으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는 안을 담았다. 정부가 주요 농축수산물과 가

공식품 수급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전망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 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뒤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생활·밥상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도 그 중 생활·밥상 물가안정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물가상승의 책임을 농산물가격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인 쌀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1000 중 5.5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7.2 정도인 커피보다도 낮은 수치로, 쌀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피보다도 적다는 뜻이다. 쌀 뿐만 아니라 채소(16.9), 축산물(27.6)의 가중치 역시 휴대전화(42.2)의 가중치보다 훨씬 낮다. 이는 농수축산물 가격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호도하여 농수축산물에 물가상승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게다가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내려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산지 평균 쌀값이 20kg 기준 4만6,7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나 폭락했다. 지난 해 초과생산되며 쌀값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시행하지 않으며 발생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나마 시행한 시장격리마저도 최저가 역공매 방식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쌀값은 더욱 떨어졌다. 사실상 물가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을 낮춘 것이나 다름없다.

4. 돈은 결국 자본에게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밥상물가 상승의 여파를 체험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들도 있다. 6월 수확철을 맞이한 노지감자는 도매가 20kg 기준 57,148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083원보다 42% 상승했다. 언론에서도 연일 ‘감자값 두 배 폭등’, ‘금(金)자 대란’ 등 자극적인 타이틀의 보도를 내놓

고 있다. 그러나 감자값 강세에도 현장농민들은 소득보전조차 어렵다.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생산량이 늘든 줄든 농민들의 소득은 날로 줄어간다. 많이 생산되면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가격을 떨어뜨리고, 적게 생산되면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싸게 팔고 있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고 있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자본에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총 265억 5,1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중앙청과의 경우 약 68억9,662만 원, 서울청과의 경우 약 66억4,280만 원을 기록했다. 한국청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43억6,000만 원, 동화청과는 약 57억3,200만 원, 대아청과는 약 29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의 독점이익이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설·제조업 등의 대기업 주주에게 현금배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청과의 주주는 태평양개발(주)(지분율 40%)과 태평양개발의 최대주주인 서영배씨(지분율 60%)이고, 서울청과의 주주는 고려제강(주)이다. 한국청과의 지배주주는 더코리아홀딩스(주)로, 한국청과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상현씨가 대표인 기업이다. 동화청과의 경우 신라교역(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아청과는 호반그룹((주)호반건설 49%·호반프라퍼티(주) 51%)이 지배주주로 있다.

지난해 동화청과는 대주주인 신라교역에 50억원을, 서울청과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고려제강에 14억1,000만원을 배당했다. 중앙청과의 경우 지난해 배당은 없었지만 2020년에 순이익을 뛰어넘는 80억3,600만원을 배당하였다.

5. 마치며

3고 시대 모든 물가가 오른다. 비료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농자재비와 사료값이 모두 오르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가격만 제자리걸음이다. 조금만 오르면 바로 물가폭등의 주범 취급을 하며 때려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전 세계는 식량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자국농업을 강화하고 자국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5가지 농정공약을 내걸었다. 당선된 이후 그의 첫 농정 행보는 ‘비료 지원예산 삭감’이었다.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률 96%에 이르는 CPTPP가입을 천명했다. 폭등하는 생산비,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3% 선이 붕괴된 농업예산부터 확보하고, 농민들에 대한 직접예산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물가인상의 책임은 농민들에게 있지 않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저금리로 투기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이 상황을 바꿔야만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제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 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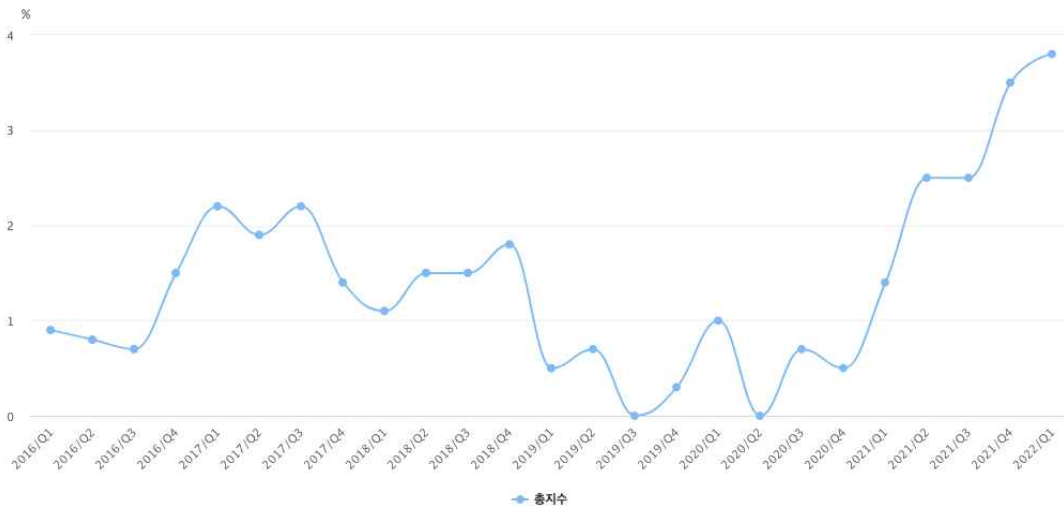
민생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

2022. 7. 4.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현황

-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 완화로 점철된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지적함.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우리 시민들은 과거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됨.
-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음.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환경은 물론 산업구조도 변화에 직면한 상황임.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로 성장-복지 선순환 이루겠다는 것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보임. 더욱이 그동안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관행적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인 사회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유의미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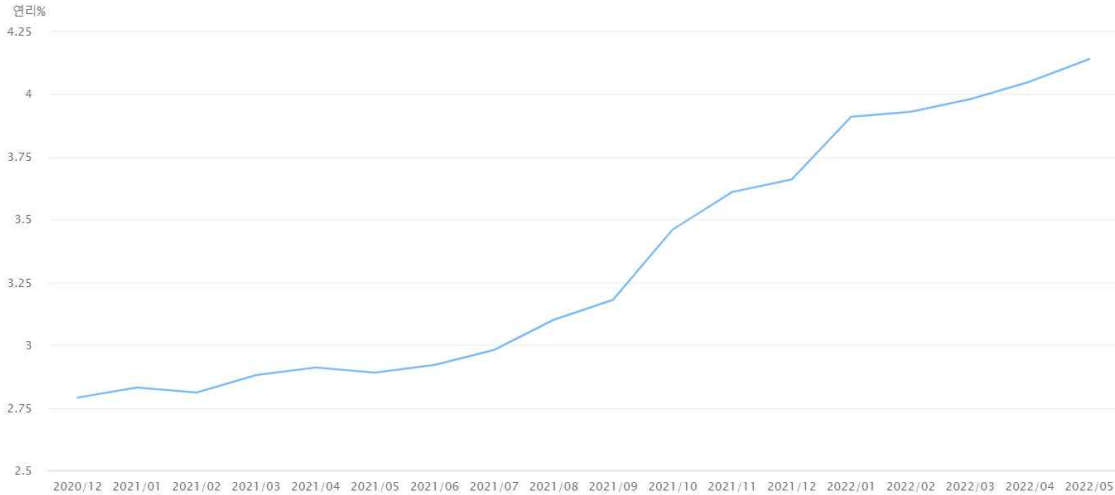
<그림1>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기대비증감율(%), 통계청)



-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전망(추경호 부총리)되고 올해 국제유가

는 전년보다 30달러 높은 1배럴당 98달러에 이를 것(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 보이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가 1년 5개월 사이 2.79%에서 4.14%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한국은행)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기 어려움.

<그림 2>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 한국은행)



2. 윤석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조세·재정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임.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세원 확보를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커녕 재정 준칙 법제화와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 등을 제시함.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위기에서 예상치 않은 큰 이익을 얻는 경제주체들이 있음에도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응 여력을 갉아먹게 될 것임.
-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는 2021년 9월까지 16.5%이며, 이는 일본(45.0%), 독일(43.1%), 미국(27.9%) 등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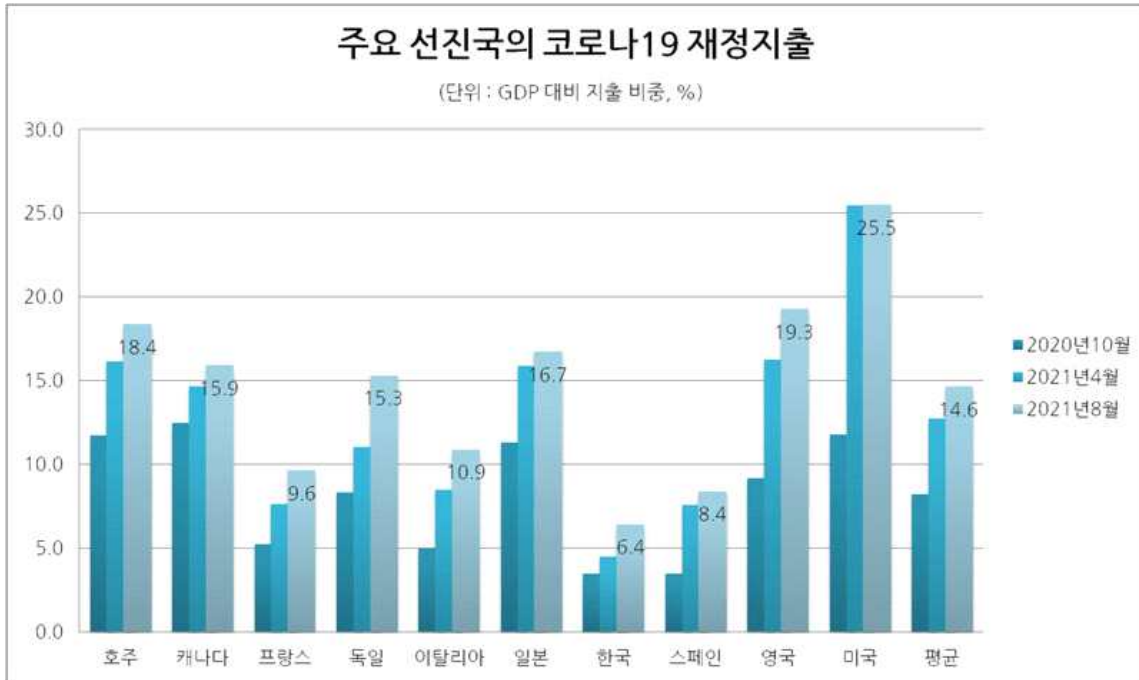
- 특히 유럽 등지에서는 부유세, 심지어 횡재세 등 누진적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결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표1>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비교

구분	GDP 대비 대응규모		증감 (b-a) (%p)
	~2021년 3월(a) (%)	~2021년 9월(b) (%)	
한국	14.7	16.5	1.8
미국	27.9	27.9	-
일본	44.2	45.0	0.8
독일	38.8	43.1	4.3

주) 2020년 1월 이후, 각각 2021년 3월 17일 및 9월 27일 기준 자료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Table.1. Summary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4. 및 2021.10. 등



출처 :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겨레

- 또한, 지난 정부에서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로의 대폭 인하에, 뚝뚝한 한 채에는 특별공제까지 더 하고 있는데, 높은 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무리한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 집부자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유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음.

-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사회안전망에 더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감세 정책은 당장 대폭 수정이 필요함.

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보여주기식이나마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작 시장경제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방향도 찾기 어려움. 이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업방임경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및 친족범위 조정, 경제범죄 형량 합리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 규제 등 공정거래와는 오히려 거리가 먼 정책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더라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임.
- 여전히 우리 경제에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체계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확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 ‘원사업자의 부담전가가 1:2순위로 확인됨.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제도화가 요구됨.
- 한 예로 현행 납품대금조정제도는 기업 노출에 따른 거래 단절과 업계 내 낙인 위협으로 인해 제도 이용이 어려운 데다 요건이 까다로운바, 이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함.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한 시장 지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보장해야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기조는 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과 안정적인 제도 마련임.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3) 복지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지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악화된 불평등을 극복할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음.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도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강화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을 형해화할 우려가 큼.
-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악을 공언한 데다 5차 재정추계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변경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

한됨. 이에 국민연금 개악을 막고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특히, 정부가 5차 재정추계 관련 사항 공유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함.

- 또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민간 중심의 공급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모습을 보임.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와 돌봄의 국가책임 필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공공책임과 보편성은 외면한 채 민간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건강권 침해와 다름없음.
- 특히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진출을 유도하고,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상향하고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완화를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를 확인할 수 있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민간중심의 복지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사회정책을 제시해야 함.

4) 노동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함.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다시금 장시간 노동 구조로 우리사회를 퇴행시킬 우려가 큼.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스타트업, 전문직, 사업장 규모 등으로 노동자를 나누고 쪼개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노동시간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임.
-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총리까지 나서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실질임금이 하락해서 민간소비가 줄어들 경우,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됨. 또한, 높은 금리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실질임금의 하락은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의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 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담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됨.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미적용 사업장에 보편 적용토록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임.

5) 민생·중소상인

-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누락됨. 2차 추경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없음.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 봉쇄조치와 동시에 매월 고정비 지원 등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했지만 한국은 코로나19 시기 재정지출에 가장 인색한 국가 중 하나임.
- 정부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96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임. 특히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오는 9월 대출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총 140조 원이 넘는 상환금이 도래하여, 다수 소상공인이 상환 불능에 빠질 위험이 제기됨.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시일이 걸리므로, 채무상환 조건 재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가 356%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자영업자 부채 수준은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자영업자 채무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면서도 그간 소상공인을 괴롭혀 온 상가임대차 문제, 가맹점 본사나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음.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임대료 나눔제 역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민간 상가임대료 분담방은 빠져 있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 고민이 시급함.
- 2021년 들어 매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약 10%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2022년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제금융협회(IIF)). 2021년 기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역시 20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정의당 장혜영 의원).

<표 2>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p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3.9	154.9	158.0	162.3	174.5	181.8	185.0	188.2	198.0	206.6
가계부채 비율 전년대비 증가폭	1.0	0.9	3.1	4.3	12.2	7.3	3.2	3.2	9.8	8.6
가계부채 증가율	4.9	5.6	6.3	9.8	10.1	7.7	6.0	5.0	9.2	9.4
가계소득 증가율	4.1	4.9	4.2	6.9	2.4	3.4	4.2	3.2	3.8	4.9

* 가계부채: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소득: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

가계부채비율: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100

출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역시 2020년 이후 10%~2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18.8%), 이는 역대급 증가세를 보인다고 언급되는 가계부채 증가율 (1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임. 그에 따라 자영업자 부채(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는 2022년 3월말 기준 960.7조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 서도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함.
- 최근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상황에서 우리 또한 추가금리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한국은행이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 유동성은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격 하락 및 이자 부담 등을 가중시켜 가계부채의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쥐어짜기 식 무분별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전면 수정이 요구됨.

6) 주거

-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시 지방의 저가주택도 1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음. 게다가 양도소득세도 1년간 중과를 유예하여, 노골적인 집부자 감세에 나섬.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상 주택에도 LTV·DSR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해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 그러나 가파른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이러한 정부 정책 하에 금융기관은 공격적 대출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거주 주택을 매각하는 '약탈적 대출'로 이어져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부실은 전국민의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전국가적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부자감세와 주택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상향 등의 대책은 제시하지 않음.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10만 호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지난 추경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주거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국민의 주거 안정은 부담 가능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형식 공공분양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차 계약갱신권 행사 횟수의 상향 등 무주택자·세입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및 과도한 임대소득자 대상 세제 혜택 철폐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보장될 수 있음.

3. 마무리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이 연이어 찾아온 복합적 위기로 인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해 위기대응 여력을 떨어뜨리고,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서 효율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경우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함.
- 따라서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를 복원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공 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함.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 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포스트 코로나와 자영업 위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

1 자영업 경영환경 변화

1.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 고령인구의 증가 및 생산연령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 측면에서의 소비자 구조 변화
-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주 소비계층의 소비위축으로 연결

2. 1인 및 저출산·맞벌이 가구 증가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비 트렌드에도 큰 변화를 야기
- 1인 가구는 강력한 소비세대로 부상하면서 온라인 간편 결제 선호하고, 가성비 등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시하며,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소비가 증가
- 저출산과 맞벌이 가구 증가는 양육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

3. 비대면 경제 확산

-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출 제한, 전국적 이동금지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활동에 급격한 영향을 끼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특히 식품산업의 온라인화를 더욱 가속화

- 2, 30대에 이어 4, 50대도 적극적 온라인 구매로 구매패턴이 변화되면서 식품류(51.1%)와 생활용품의 상품군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들은 한번 소비패턴을 결정하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상품 특성 존재

2 자영업의 소득 불평등 심화

1. 고용의 변화와 최저임금

-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급증
- 자영업의 비용 가운데 유일하게 축소 가능한 것이 인건비
- 인력난의 심화로 인해 향후 무급 가족 종사원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증가 예측
- 고용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도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
-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2, 30대가 원하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식업 등에서의 인력난 심각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종료(6월)

2.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

- 식자재 평균 30%대에서 50%대로 급상승. 매출 대비 소득 저하
-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자영업 대출 만기 시 (9월) 대혼란 예상
- 자영업 대출 총 960조

3.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소득 감소

-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배달비 등으로 인해 매출 대비 소득 감소

3 새 정부 자영업 정책과제 평가

1. 새 정부 자영업 정책과제

1) 소상공인 자영업의 온전한 손실보상

- 온전한 손실보상에서 후퇴하여, 소급적용 불가 원칙에 총 370만 개 사에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 발생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 증가 업체와 폐업 업체)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예정

2)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지원

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4)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5)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6)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2.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진행 상황과 미래 예측

1) 민간·자율 규제 강조

- 대기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문제 심화 가능성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완화 조짐 (인터넷 영업 가능)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 부정

2)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피해지원) 소급적용 불가 선언
- 손실보전 이후 자영업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책 부재
- 임대료 대책 실종 (임대료 분담 공약)

3) 소상공인 지원 축소 예측

-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로 인한 할인율 감소 문제 발생
- 향후 지역화폐 지원예산 폐지 가능성 존재
- 골목형 상점가,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는 민간주도 권장

4)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방임 정책

-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자율과 민간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임으로 일관할 가능성 존재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 론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반노동 반농민 반서민 반민생 윤석열 정부에 대응한 공동행동 모색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1. 최근 경제 상황 과 윤석열 정부의 반서민 정책 그리고 민중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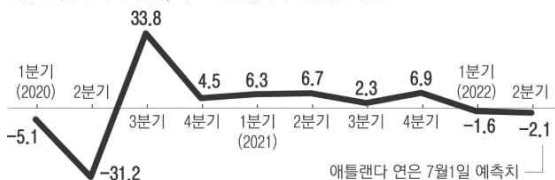
1) 미국 연내 금리 7%까지 인상? 물가 대응 거세지는 연준- 내부 문서 “금리 4~7%까지 올려야”

(1) 내달 ‘자이언트스텝’ 거의 확실시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정책(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자이언트스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준 인사들의 물가 발언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부터 잡고 보겠다” 는 식
- 6월 19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지는 상관없지만, 너무 높다. 이를 낮추는 게 내 일” 이라고 언급.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연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해 안에 연 4~7%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보도.
- 파월 의장 역시 7월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재차 시사할 것으로 예상됨.

(2) 미국의 경기 경착륙 경고 - 더블딥, 스테크플레이션 경고

미국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 대비 연율), 자료: 미국 상무부·애틀랜타 연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미국 노동부



그림 17 경향신문 7월 5일자 그래프 인용

- 40년 만의 기록적 물가 상승과 급격한 금리 인상, 주식·가상통화 시장 혼

란을 겪은 미국 경제의 시름이 하반기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 미국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경제가 하반기 ‘더블딥’ 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 는 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2.1%로 예측.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 것. GDP나우는 지난달 27일 2분기 성장률을 0.3%로 예측했다. 일주일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

-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통상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음
- 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분석기관의 관심사는 ‘침체냐, 아니냐’ 보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로 옮겨간 상태.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관리 대부분은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폈었음.

2) 한국, 무역수지 적자

(1) 상반기 무역수지 -103억 달러 - “하반기 수출 0.5% 증가 그칠 것”

-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 그동안 두 자릿수였던 수출 증가율이 지난달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가 본격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철강·석유제품·바이오·2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실적을 거뒀음. 그러나 같은 기간 수입액이 3606억달러로 전년보다 26.2%나 늘면서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879억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410억달러 늘어난 영향이 컸음. 이 기간 유가는 배럴당 63.50달러에서 101.83달러로 60%가량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229%, 석탄은 약 223% 상승
-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큼. 당장 지난달 수출액이 57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하는 데 그쳤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수출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 반면 수입액은 60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한 것.

(2) 한·미 금리역전 불가피

- 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이르면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제히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조만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한은도 기준금리를 높이겠지만,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을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

- 특히 금리 인상으로 가계·기업 부채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점은 한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연준의 기준금리 범위는 연 1.50~1.75%,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상단이 같다. 금통위가 7월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해도, 연준이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됨



3) '2300' 무너졌다, 코스피 2391...19개월 만에 최저

(1) 6월 13일 88조원, 6월 20일 36조원 주식시장에서 날라가

- 6월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증가보다 49.90포인트(2.04%) 내린 2391.03에 장을 마쳤음. 2400선 아래에서 장이 마감한 것은 2020년 11월4일(2357.35) 이후 1년7개월여 만.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84%) 떨어진 5만8700원에 장을 마쳤음.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음.

원/달러 환율 추이



원형민 기자 20220705

(2)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연고점

-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까지 넘어서고 있음. 종가 기준으로 2009년 7월14일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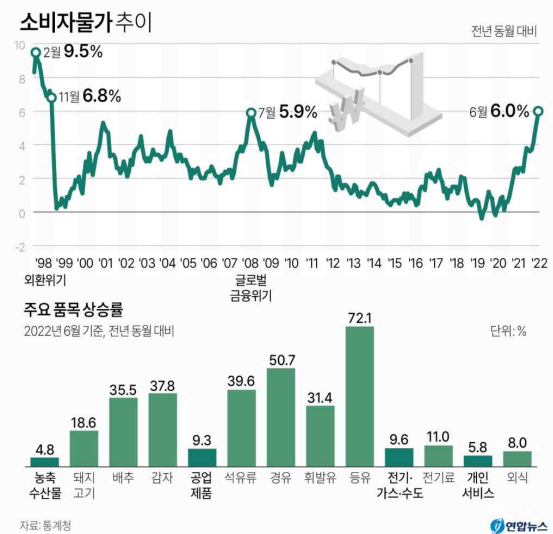
4) 24년 만에 6%대 물가 상승

(1) 숨통 죄이는 민생

- 6월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6%대를 넘었음.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7.4%로 나타났음

- 소비자물가가 6%를 넘어선 건 지난 1998년 11월 6.8% 이후 24년 만임.

-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에서는 감자와 배추, 포도 등 농산물이 30%대 상승률을 보였고,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27.2%, 18.6% 올랐음



원형민 기자 20220705

- 공업제품의 경우 경유가 50.7%, 휘발유가 31.4%, 등유가 72.1%, LPG 29.1% 각각 상승. 이밖에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11% 올랐고, 상수도 요금 역시 3.7% 상승했음
- 통계청은 다음 달 7%대 상승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
- 하반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국제 유가 상승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 사태와 기후위기 등으로 곡물가 상승임.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 상승 때문

(2) 한달 사이 1조 2000억원 늘어

- 1862조원. (2013년 1000조원의 약 2배).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가계부채 규모. 총액 자체도 문제지만, 2년 전인 2020년 5월에 비하면 260조원가량 급등.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가계부채는 올 들어 조금씩 줄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늘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조2000억원 늘었음.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매달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 여기에 보험사 등의 대출을 더하면 더욱 커질 것.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6.1%에 이룸. 1년 전에 비해 2.7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수준(80%)을 크게 웃도는 것

(2) 추경호 “물가 5%대, 임금 인상 자제를” - 규제완화 대기업 특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갖음. 그는 “경쟁적인 가격과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음. 사실상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
- 한편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부장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보유세 인하, 규제완화, 자율구제 등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주고 있음
- 주 52시간제 완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저임금 노동자 양산하는 임금체계 개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음.

5)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집부자 특혜, 집값 고공행진 떠받치기

-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이었음
- 이러한 정책은 집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며 집값 고공행진을 떠받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소수의 다주택자의 세금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감면해주는 것.
-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만 부여하고 ‘세입자’ 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과한 혜택 주어진 상황에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그저 기만으로 들릴 뿐.
- 또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변경 등을 예고. 이것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것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
- 한편,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

(2)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 5월 23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과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집값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었음.

(3) 주택담보대출 8% 진입 전망 - 영끌 청년들 벌써 고통호소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께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고 7%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0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큼.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

회(이하 금통위)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 또는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에 대응해 연말까지 네차례(7·8·10·11월) 연속, 총 1.00%~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시장금리와 그에 연동한 대출금리도 함께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음.

- 직방이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인상된다는 가정 하에 서울 아파트의 월 대출 상환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261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용면적 59㎡는 246만원, 전용 84㎡는 291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직방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418만9000원인데, 이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매입 시의 월 주담대 상환액의 비율은 전체 면적 아파트에서 금리 4%일 때 45%이나, 금리가 7%까지 상승할 경우 62%로 평균소득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

-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산 대출자들이 상당한데, 특히 2030세대가 이중 과반이상임.

- 최근 금리 인상에 대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주택 거래절벽과 미분양이 늘며 집값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 ‘하우스푸어’ 공포까지 엄습할 것. 하

6) 서민들의 비명소리

(1) “한달 84만원 중 식비만 35만원“...

-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식료품이나 외식 등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 가운데 식료품·외식비(35만7754원) 명목 지출이 차

소득 분위별 식비지출 동향

※1분기 월평균 기준

처분가능소득 (원) 식비지출(원, 식료품·외식등명목지출) 식비지출비중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The JoongAng

지한 비중은 42.2%로 집계됐음.

-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식비로 지출한 것

(2) 쌀값 폭락은 원인 - 정부의 가격 후려치기가 원인

- 현재 쌀값은 2021년 10월 이후부터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 22년 6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534원으로 전년 수확기 시작인 5만6,803원보다 19.8% 떨어졌음.
- 이는 쌀값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정부가 물가상승의 책임을 쌀에 뒤집어씌우고 어떻게든 쌀값을 떨어트리려고 했기 때문
- 비료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리고, 농자재비와 사료값 모두 오르는데, 이처럼 농수축산물 가격만 때려잡으려 한다면 농수축산인의 선택은 결국 농수축산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을 것.

(3) 5월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치

-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집계.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각각 5.4%, 3.0%였음.
-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001년 5월(9.0) 이후 가장 높았음.
- 이 같은 기록적인 경제고통지수는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음. 반면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2013년(3.0%) 이후 가장 낮게 집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7.9)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
-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금인상 동결 또는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

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권력기관 장악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가폭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폭락하고 있음. 중요한 점은 우크라 사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 폭등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
-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10%)이 가장 큼. 윤 대통령이 기대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효과는커녕 데드크로스를 걱정해야 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

여론조사기관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데드크로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재운 기자 20220704

2) 검찰 공화국 - 검찰, 경찰, 국정원, 금강원, 공정위까지 장악

- 윤석열 대통령이 구가정보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던 조 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기도 했음.
- 2019~2020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이었음. 조 선임 실장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오른팔·왼팔로 불린 최측근
-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임

명.

- 금감원 위원장으로 이복현 검사를 임명함. 이복현은 평검사 때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짐.
- 법무·수사·인사에 국정원·공정위까지 검찰 출신이 동시에 지휘한 전례가 없음. ‘검찰공화국’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3. 공동 대응 모색

1) 사업 방향

(1) 부자 천국, 서민지옥

- 반민생 반서민 정책 폭로 지속(기자회견 / 피켓팅 등 행동), 카드뉴스 등 제작 배포하며 조직화와 교양
- 경제위기와 물가폭등에 따른 고통을 서민들에게 집중 시킴
- 반면 각종 규제완화, 부자감세, 중부세 완화 등 부자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

(2) 부자 공간을 털어 서민을 위해

- 하반기는 더욱 가파르게 물가상승폭이 높아짐에 따라 고통이 가중될 것. 공기업 민영화와 물가폭등을 연동시키는 것 중요할 것
- 부자의 공간을 털어서 서민의 실질임금을 인상, 서민에대한 부채 이자율을 낮추고 나아가 부채탕감 등을 요구
- 은행의 국유화, 석유기업들에게 대한 횡재세 부과 등 요구

(3) 민생 대회 개최하며, 각계를 모아내는 방안 모색

- 매월 민생대회를 개최하며,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 등의 목소리르 모아내는 자리.
- 또한 각계의 요구를 집약하는 자리

2) 공동 행동 모색

(1) (가칭) 물가폭등 못 살겠다. 정부가 책임져라! 2차 민생대행진

① 1차대회 진행 및 제안취지

- 폭발하는 물가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민생의 목소리를 향후 지속적으로 민생대회 개최로 모아냄으로서 하반기까지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고 투쟁 주체를 형성해 나감.
- 1차 대회는 7/2(토) 14시 노동자대회 사전 대회 방식으로 진행.
- 내용 : 물가, 유가, 금리, 부채, 부동산 폭등 등 정부정책 규탄
- 진행방식 : 대회 + 행진(퍼레이드)

② 2차 대회

- 일시. 장소 ; 8월 27일 (토) 진행 예정

(2) 공동 토론회 개최 및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민의 분노 (2차 토론회)
- 농민, 서민, 빈민의 어려운 토로하는 집담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하는 공동 연명 기자회견 개최 등

(3) 기고와 행동전

- 여론화를 위한 기고 사업
- 각계 상징행사 및 피켓팅 등 공동 선전활동